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 Policy Weekly

# 세종Law Focus

##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51** | 2026. 9. 28. (2026. 9. 21. ~ 2026. 9. 27.)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지 전수조사 및 농지법 개정과 관련하여 언론, SNS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지적에 대해 농지법 위반 시에도 충분한 자진 처분 기간 및 유예 기회를 부여 중이고, 올해 농지 거래량은 소폭 증가한 반면 실거래가격 하락 폭은 둔화했다는 등 **「개정 농지법과 농지 전수조사 관련 사실관계」**를 발표하였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자 권익 증진 및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과 그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책은 지난해 7월 지원금 상한 규제 등「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개정된「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장 경쟁은 촉진하면서 부당한 지원금 차별,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과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구분함에 따라 각 유형별 인증기준을 설정하기 위한「**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국토교통부>**는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의 세대수 기준을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연면적 비율 기준도 9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의**「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조 높이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제외 대상규정을 법률의 위임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다세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등의「**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합병, 분할 등 조직개편행위 시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공정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변경되고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외부평가가 의무화되는 바, 법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및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0인)」,**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최대 3배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기준을 5배로 상향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시정명령으로 재발 방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사업 부문의 매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정률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6으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정액 상한을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1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의 내용·조건 등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영상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보상청구권을 제도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기업의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의 보고 사항으로 명시하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0인)**」,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에 관한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시적인 감시·감독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감독 체계를 실질화하고, 전력산업 전반의 방대한 정보를 통합·관리·공개하는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면제 기준을 소액계약으로 한정하는 한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0인)**」,

복합용도건축구역의 지정과 도시계획·건축·주차장 관련 특례, 주택전환건축물에 대한 특례와 허가 절차, 집합건물의 주택전환 절차, 통합심의, 적응형 설계 및 성능기반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안태준의원 등 12인)**」,

고용분야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며, 근로자에게 임금정보공개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10.1. 안건 심의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정무위>, <재경위>, <문체위>, <복지위>, <기후노동위>, <국토위>** 등에서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전체회의가 개최됩니다.

# 목 차


##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배터리 산업기술 로드맵」 발표(산업통상부) ····· 7

## II. 입법(안) 동향

###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 9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후에너지환경부) ····· 9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9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0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 10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 10

###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 12
-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 12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 13

###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 14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2인) ····· 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 1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 ····· 15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 15
-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8인) ····· 16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4인) ····· 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4인) ····· 17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0인) ····· 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 18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 ····· 1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1인) ····· 19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4인) ····· 19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 20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 20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문영의원 등 10인) ····· 2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 21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 22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6인) ····· 22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3인) ····· 23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0인) ····· 23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3인) ····· 24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3인) ····· 24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 24


##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5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노동]** 법원, 노란봉투법에 따른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첫 기각
- **[노동]** 서울행정법원,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집행정지 결정
- **[건설/부동산]** 세종 건설클레임센터 Monthly Insight 9월호
- **[소송]** 재판소원 제도 도입 5. 사전심사를 통과한 재판소원 사건
- **[조세]** Tax Intelligence 9월호
- **[공정거래]** EU 배제남용 가이드라인 채택에 따른 주요 판단기준과 시사점
- **[기업인수/합병]** 가상자산거래소 인수계약에 대한 매도인들의 기망 및 진술·보증 위반을 인정하여 약 241억 원의 매매대금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산업통상부 | 「배터리 산업기술 로드맵」 발표<br>- '나트륨' 및 '전고체'에 집중 지원<br>- 총사업비 약 4천억 원의 R&D 신설, 민간은 8조 원의 투자를 결집 | 2026-09-22 |
|---|---|---|

산업통상부는 **「배터리 산업기술 로드맵」**을 발표하였음

최근 글로벌 시장은 전기차 성장세 둔화 및 주요국의 지원 정책 후퇴와 더불어 원가 경쟁 심화, 자국우선주의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음. 특히, 중국은 보급형(LFP)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나트륨 및 전고체 등 차세대 기술의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와 국내 배터리 업계는 하이니켈(NCM) 중심의 전략에서 벗어나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미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민관 합동의 전략 로드맵을 확정하였다고 밝힘

로드맵의 3대 핵심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음

**❶ [미래 준비] 차세대 보급형(나트륨) 및 고성능(전고체) 배터리 집중 지원**

- (나트륨) '27년 160Wh/kg급 개발 → '30년 220Wh/kg급 개발 완료 및 본격 상용화
- (전고체) '27년 세계 최초 시제품 출시 → '28년 400Wh/kg급 개발 완료 → '30년 본격 상용화
- 리튬에 비해 저렴하고 공급망 리스크가 적은 '나트륨 배터리' 상용화에 예산을 집중 투자
- 에너지밀도와 안전성을 극대화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병행하여, 로봇·드론·UAM 등 신산업용 배터리 시장을 창출

<차세대 배터리 주요 특성 비교>

| 구분 | 나트륨 배터리 | 전고체 배터리 | | |
|---|---|---|---|---|
| | | 고체전해질 | 리튬메탈 음극 | 리튬황 양극 |
| 소재 | 반응이온<br>(리튬 → 나트륨) | 전해질<br>(액체 → 고체) | 음극재<br>(흑연계 → 리튬금속) | 양극재<br>(니켈계 → 황·탄소) |
| 장점 | 가격↓·안전성↑ | 에너지밀도↑·안전성↑ | 에너지밀도↑ | 무게↓ |
| 용도 | 보급형 EV, ESS 등 | 고성능 EV, 로봇 및 드론, UAM 등 | | |

**❷ [협력 강화] 완제품·셀·소재社 간 수직·수평적 R&D 협력의 생태계를 조성**

- 기업 간 독자 개발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셀3사 간 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개발된 소재가 상품화로 이어지는 소재-셀 협력 과제를 추진
- BMS 데이터를 배터리 개발에 활용하는 정보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배터리의 표준을 마련하여 글로벌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방침

<협력 강화 사업 例>

| 구분 | 방향 및 내용 | 시작 | 완료 |
|---|---|---|---|
| 셀社간 협력 | ▶ **(규격화)** 원통형 배터리의 크기 기준 → 파우치·각형의 치수 제안<br>▶ **(공용 소재)** 차세대 집전체 등 비경쟁 분야의 공동 사양 제시 | '27 | '30 |
| 사업화 연계 | ▶ **(소재社)** 목표한 성능·가격의 소재 개발 → **(셀社)** 소재 실증 및 구매 | '27 | '31 |
| 정보 환류 | ▶ **(EV社)** BMS 정보 추출 → **(셀·소재社)** 배터리 성능 향상에 활용 | '27 | '30 |
| 표준 대응 | ▶ **(1단계)** 평가 절차 마련 → **(2단계)** 용도별 요구사항을 담은 표준 마련 | '27 | '30 |

**❸ [원가 절감] 민간 주도의 가격 경쟁력 확보 및 국산화 체계 구축**

- 생산 세액 공제 도입과 함께 EU 등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순환형 배터리 생태계 구축을 유도
- 민간 기업들은 공정 혁신, 소재 다변화, 핵심소재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며 `30년까지 약8조원 규모의 R&D 및 설비 투자를 집행하기로 뜻을 모음

<원가 절감 例>

| 구분 | 방향 및 내용 | 시작 | 완료 |
|---|---|---|---|
| 제도 | ▶ **(세제 지원)**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생산 세액 공제를 신설 | '27 | - |
| | ▶ **(재활용)** EU와 같은 재활용 목표율 제시 → 민간의 순환 생태계 구축을 유도 | '27 | '30 |
| 공정·소재 민간 투자 | ▶ **(공정)** 저탄소화 및 에너지 고효율화 등 에너지 저감 공정 도입 | '26 | '30 |
| | ▶ **(소재)** 저가형 소재 개발 및 수입 소재의 국산화 | '26 | '30 |

# II. 입법(안) 동향

##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처명 | 예고 법령안 | 시행일자 |
|---|---|---|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026-09-22 시행 |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혁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자산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혁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 사업을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자산등 및 회사채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의 업무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부처명 | 예고 법령안 | 시행일자 |
|---|---|---|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026-10-08 시행 예정 |

시민의 숙의와 참여를 제도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 등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며 정책 수립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시민회의를 신설하고,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며, 정부가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122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 및 법률 제21527호, 2026.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기후시민회의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선정하는 10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하도록 하고, 국립기후과학원이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을 실시하고 그 예측 결과 등을 반영한 공간정보 및 지도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부처명 | 예고 법령안 | 시행일자 |
|---|---|---|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027-01-23 시행 예정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의 효율적인 적발과 신속한 처분을 위하여 불법 하도급이 발생한 건설공사 현장과 건설사업자의 영업소소재지의 관할구역이 다른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권한 위임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급인이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후 시정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026-09-22 시행 |
|---|---|---|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의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를 하는 공공주택사업 등의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없더라도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2026-12-23 시행 예정 |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을 삭제하고, 시·도지사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할 구역의 일부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2027-03-23 시행 예정 |
|---|---|---|

**철도지하화사업의 범위에 고속철도 등의 선로 상부에 지반상태와 유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고시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결정·지정 등의 의제를 정하는 한편, 시·도지사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지하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처명 | 예고 법령안 | 의견접수기간 |
|---|---|---|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026.09.22. ~2026.11.02. |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구직급여 일액의 상·하한액의 역전을 예방하기 위해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액 산정 방식을 개편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기한을 규정하며,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자료요청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안 제26조제1항제3호)**
- 성별과 무관하게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

**②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액 산정방식 변경 (안 제68조제1항, 제104조의8제4항, 제104조의15제4항)**
-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매년 변동되는 반면 상한액은 정액으로 결정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하한액의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액 산정방식을 기존의 정액 결정 방식에서 하한액과 연동된 방식으로 변경함

**③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기한 근거 마련 (안 제86조제4항)**
-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기간을 청구권이 최초 발생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④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자료요청 범위 확대 (안 제142조의2 제1호 나목 및 다목)**
-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를 위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급여 환수 및 직장 가입자격 변동상실 등 그 사유와 관련된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요청대상 자료범위에 추가함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전화: 044-202-7918, 팩스: 044-202-8038)

| 부처명 | 예고 법령안 | 의견접수기간 |
|---|---|---|
| 고용노동부 |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026.09.22. ~2026.11.02. |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사후적 형사처벌 외에 광고의 수정·삭제를 직접 명할 법적 수단이 없어 광고가 게시되어 있는 동안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는바, 개정 「직업안정법」(법률 제21787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 구인광고에 대하여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하고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치명령의 방식·절차와 관계기관 통보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개정으로 영 제28조제1호의 준수사항이 법 제25조제1항제4호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전화: 044-202-7393, 팩스: 044-202-8037)

| 산업통상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026.09.21. ~2026.11.02. |
|---|---|---|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裁定)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682호, 2026. 5. 26. 공포, 2026. 11. 27. 시행)됨에 따라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재정의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 (전화: 044-203-5238, 팩스: 044-203-4762)

##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제사법위원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 2026-09-21 발의 |
|---|---|---|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없고, 회일로부터 1주간 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그런데 현행법상 공탁 제도는 실물 채권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어 사채권자의 권리가 전자적으로 등록되고 있는 현행 실무에 부합하지 아니함. 권리를 전자등록한 사채권자가 소집청구나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자등록기관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다시 별도로 공탁하여야 하는 등 절차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사채권자집회의 참석률 저조 및 정족수 미달로 인한 집회 무산 등의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전자등록한 경우 소유자증명서의 제출로 공탁을 갈음하도록 하여 권리행사 요건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소유 확인 및 이중 권리행사 방지 기능은 유지**함으로써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492조제2항 단서 신설 등)**

| 정무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2인) | 2026-09-21 발의 |
|---|---|---|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의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대리인의 업무 수행 여부 및 적정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내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시정하거나 국내대리인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및 공표명령의 이행을 추가하고, 국내대리인의 지정·변경·지정 종료 사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연락처, 대리권의 범위 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시정명령 또는 국내대리인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내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확인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내대리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31조의2 및 제75조)

| 정무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 2026-09-21 발의 |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공급망 위험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기업가치와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국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등을 반영한 법정공시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정보는 파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과 정보의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오류에 대한 책임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기업운영과 투자 과정의 불확실성을 가중할 우려가 있음

이에 **회사의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하며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공시의무화 도입 초기의 혼란을 예방하여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159조 등)**

| 정무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 | 2026-09-22 발의 |
|---|---|---|

현행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제12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그러나 전쟁·재난 및 공급망 위기 발생 사실을 이용하여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져 소비자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심화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쟁, 재난, 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하고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40조, 제43조 및 제124조 등)**

| 정무위원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 2026-09-23 발의 |
|---|---|---|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금융생활의 편의성이 제고되었으나,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정책을 규율하고 있으나, 금융취약계층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한 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방으로 하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5조, 제16조의3 및 제29조)**

| 정무위원회 |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8인) | 2026-09-23 발의 |
|---|---|---|

부동산불법행위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러 부처 소관의 다수 법률 위반이 하나의 사건에 결합된 조직적·지능적 복합사건으로 진화하여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대응체계는 개별 기관이 각자의 소관 법률과 제한된 정보의 범위에서 단편적으로 점검·조사하는 구조여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복합 불법행위를 조기에 인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 그 결과 부동산불법행위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어 불법행위가 적시에 적발·제재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관계기관의 조사·수사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감독원이 직접 조사·수사하도록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의 검증 결과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교차 활용하고 조사·수사 처리 사항을 관리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여 불법행위 대응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감독원장의 임기 보장으로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조사와 수사 간 정보교류를 차단하고 조사·수사전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민의 권익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재정경제위원회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4인) | 2026-09-21 발의 |
|---|---|---|

현행법은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수입국가 다변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기술개발, 비축,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등에 관한 지원 시책을 규정하고,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금융 지원, 조세 감면, 보증·보험 등의 지원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이차전지·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광물 수요가 증가하고 특정 국가 의존이 심화되면서 공급망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폐배터리·폐전자제품 등에서 회수한 핵심광물 재생원료의 활용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원 규정은 일반적인 경제안보품목 지원에 그쳐 재생원료 생산기업에 대한 금융·보증·비축·물류 지원과 국제 인증 취득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위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핵심광물 재생원료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재생원료 생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보증·비축·물류 지원과 국제 인증 취득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도시광산 등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안 제23조의2 신설)**

| 재정경제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4인) | 2026-09-21 발의 |
|---|---|---|

현행법은 내국인이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되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하여 우대공제율을 부여하고 있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필수 소재인 핵심광물은 국내 매장량이 부족하여 해외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핵심광물을 재자원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상 별도의 우대규정이 없어 민간의 투자 유인이 부족하며, 재생원료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다수의 소규모 수집·재생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조사업자가 정상적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핵심광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생원료를 취득하여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에 준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 등)**

| 재정경제위원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0인) | 2026-09-21 발의 |
|---|---|---|

현행법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국세감면액 총액이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국세감면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국세감면한도를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일정 비율을 더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국세감면한도 계산방식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그 실제 국세감면율이 이후 국세감면한도 계산에 그대로 반영됨에 따라 국세감면율 실적이 높을수록 이후 국세감면한도도 함께 높아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국세감면한도 제한을 통한 조세지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상임위 결산 심사시에도 지적된 바 있음

이에 **국세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연도에 대해서는 실제 국세감면율 대신 해당 연도의 국세감면한도를 국세감면율로 보도록 함**으로써, 국세감면한도가 직전의 높은 감면실적에 따라 계속 상승하는 것을 제한하고 국세감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88조제1항)**

| 재정경제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 2026-09-21 발의 |
|---|---|---|

우리 경제의 핵심 주력산업인 전기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은 글로벌 공급망과 통상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들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 훼손은 물론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과 경제안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임

특히 전기차 산업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의 빠른 점유율 확대, 이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고율 관세 부과,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 및 자국 생산분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등의 세제혜택 등으로 국내 생산물량이 해외로 이전되거나 신규 투자가 해외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기존의 국내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향후 생산 확대를 국내에서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단순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투자에 대한 지원을 넘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 자체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생산기지를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므로, **'생산'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 지원인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당면한 제조업 공동화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 재정경제위원회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 | 2026-09-22 발의 |
|---|---|---|

현행법은 위기품목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단독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다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전쟁, 재난, 공급망 교란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의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기품목의 제조자·수입자·판매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그 생산·출고·공급을 제한하는 등 위기품목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위기상황에서의 국민경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33조의2 및 제50조)**

|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1인)** | 2026-09-22 발의 |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험 결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보호인증이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큰 기기까지 아무런 보안 검증 없이 제조·수입되고 있으며, 미인증 기기의 시장 유통을 차단할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고위험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정보보호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아니한 고위험기기등의 판매 등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의6제3항·제4항 신설 등)**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4인)** | 2026-09-21 발의 |
|---|---|---|

현행법은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하여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사업의 추진,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후제품·산업부산물 등에 함유된 핵심광물을 회수·선별·정제하여 재투입하는 도시광산 기반의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국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화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재활용 원료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광산을 활용한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의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원료의 확보·비축·유통, 관련 기술개발 및 도시광산 기반시설의 구축·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도시광산을 통한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고 국가자원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 **2026-09-21 발의**

현행법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디자인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는 반면, 현행 「상표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간 권리구제 수단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 배상한도를 상향**함으로써 현행법상 권리구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15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 **2026-09-21 발의**

여성기업 육성을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협회에 대한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의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거나 여성기업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여성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여성기업 확인 신청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여성기업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기업 확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기업 확인 취소 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산업통상자원<br>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br>일부개정법률안(임문영의원 등 10인) | 2026-09-22 발의 |
|---|---|---|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로 공실·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에 이르고, 수분양자의 연체·파산 위험도 현실화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설립승인 단계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할 절차를 두지 않고 있으며, 공실·미분양 현황을 파악하여 공개할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급 조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입주업종을 열거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융복합 신산업을 수용하기 어렵고,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는 조업 전 임대 제한 등 공장부지에 준하는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어 산업단지 밖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업종을 확인할 절차가 없고, 분양권 쪼개기 전매, 허위·과장 광고, 부적합 업종 입주 등을 규율할 수단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설립승인 전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제시 절차와 공실·미분양 현황의 공개 의무를 마련하고, 유휴시설 매입사업의 지원 근거를 두며, 입주규제를 완화하고 산업단지 안팎의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수급을 조절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산업통상자원<br>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br>전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 2026-09-22 발의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2009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제정된 이래,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촉진과 판로지원 정책의 기본 틀로 기능하여 왔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체 9장 52개 조문 중 약 36개의 조문이 공공구매(B2G)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로서, 규모가 큰 민간 소비시장(B2C) 및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실제 시장 규모에 비해 정책 범위가 협소하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정책 공백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음

최근 유통환경은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라이브커머스, 인공지능(AI) 기반 추천·물류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유통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촉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중소기업은 대형 플랫폼과의 교섭력 열위로 인해 입점·노출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구매패턴 분석 등 데이터 기반 마케팅 역량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도 어려워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구매 중심의 현행 법률을 민간소비시장 및 기업 간 거래 시장까지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로 전환**하고자 함.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온라인 유통채널, 대형유통망, 기업 간 거래 플랫폼 등 다양한 판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소비자 구매패턴 분석, 유통채널별 데이터 활용 등 데이터 기반 마케팅 역량을 갖추고 시장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또한, **공공구매가 중소기업의 시장 확대와 글로벌 진출의 발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공구매 참여기업의 민간시장 진출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위원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 2026-09-22 발의 |
|---|---|---|

온라인 신선식품 배송이 확대되면서 식품 배송에 사용되는 회수용 보냉가방과 재사용 보냉재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중심으로 위생관리를 규정하고 있어, 포장된 식품을 수납·배송한 후 회수·세척하여 반복 사용하는 프레시백 등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는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프레시백 등의 세척·소독·건조방법, 정기검사, 반복 오염 시 개선조치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식품위생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를 별도의 위생관리대상으로 정의하고, 이를 제공·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자에게 세척·검사 및 기록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기적으로 위해요소 조사를 실시하여 위생관리기준을 마련·재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신선식품 배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오염을 예방하여 식품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6인) | 2026-09-22 발의 |
|---|---|---|

최근 주요국들의 에너지안보 조치 강화로 인한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수요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 에너지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규율을 강화하고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에너지 수요 관리 규율을 강화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보유한 정보를 제3자가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그린버튼 구축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고효율과 저소비 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토교통위원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3인) | 2026-09-21 발의 |
|---|---|---|

현행법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44조), 영세 건설사업자의 경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어려운 실정임

그런데,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면서, 국가 등 공공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26. 10. 시행 예정) 있음

이에, 정보통신공사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해자 보호 및 건설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발주자의 경우, 보험(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안 제44조제5항,제6항 및 제7항 신설)**

| 국토교통위원회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0인) | 2026-09-22 발의 |
|---|---|---|

현행법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인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과 국토교통부고시인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라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형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보관물품의 종류별 보관위치, 물류창고의 구조 등에 관한 정보가 제출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견이 있으며, 이는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물류창고의 구조 또는 보관물품의 종류별 보관위치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통하여 물류창고 정보를 현행화하는 것에 관한 근거가 미비한 것이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물류창고업자가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계획의 중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창고에서의 화재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의4 신설 등)**

| 국토교통위원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3인) | 2026-09-22 발의 |
|---|---|---|

현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4조제2항), 공사대금 또는 공사기간 등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계약 변경 시 이를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규정**하여 하수급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 **(안 제34조제2항 본문 개정 등)**

| 국토교통위원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3인) | 2026-09-23 발의 |
|---|---|---|

현행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각종 간접비가 반영되지 않거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이를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법에 따라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노무비가 계약금액 산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거나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법정 의무배치 기술자의 인건비가 계약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안 제40조제4항 신설)**

| 국토교통위원회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 2026-09-23 발의 |
|---|---|---|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임. 이러한 제도적 제약으로 수도권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개발기간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길어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비수도권보다 열악한 여건임. 그럼에도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여러 정부 정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있는 산업단지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또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 차원에서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7조제3항제1호)**

#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 1. 본회의 일정

| 구분 | 일시 | 내용 |
|---|---|---|
| 본회의 | 10/1(목) 14:00 | - 안건 심의 |

## 2. 위원회 일정

| 구분 | | 일시 | 내용 |
|---|---|---|---|
| 법사위 | 전체회의 | 9/28(월) 14:00 | - 법안 심사,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
| 정무위 | 전체회의 | 9/28(월) 16:00 | - 안건 미정 |
| 재경위 | 전체회의 | 9/28(월) 14:00 | - 법안 상정,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
| 문체위 | 전체회의 | 9/29(화) 10:00 | -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
| 농해수위 | 농림축산식품<br>법안소위 | 9/29(화) 10:00 | - 법안 심사 |
| 복지위 | 전체회의 | 9/29(화) 10:00 | -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
| 기후노동위 | 전체회의 | 9/28(월) 14:00 | -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
| | 기후에너지<br>환경법안소위 | 9/29(화) 14:00 | - 법안 심사 |
| 국토위 | 전체회의 | 9/30(수) 10:00 | -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

#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 구분 | 일시 | 내용 | 주최 | 장소 |
|---|---|---|---|---|
| 토론회 및 세미나 | 9/28(월) 10:00 | **자동차 금융(캐피탈) 시장의 문제점 진단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포럼** | 이강일·강준현 의원실 |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
| | 9/28(월) 14:00 | **「산업·에너지」 전략** | 김소희 의원실 |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
| | 9/29(화) 10:00 | **AI 시대에 부응하는 원자력, 원자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 고동진 의원실 | 의원회관 1세미나실 |
| | 9/29(화) 10:00 | **K-방산 발전 세미나** | 유용원 의원실 |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
| | 9/29(화) 10:00 | **국내 종자산업 지원강화 방안 토론회** | 엄태영·서삼석 의원실 | 의원회관 3세미나실 |
| | 9/29(화) 10:00 | **에너지 산업국가전략 국회 연속토론회: 4차- 새로운 전력 미래 비전-해상 SMR** | 박정 의원실 | 의원회관 2간담회의실 |
| | 9/29(화) 14:00 | **AI 시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정책 과제** | 김재원 의원실 |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
| | 9/29(화) 14:00 | **양자기술 국회 연속세미나: 제4차 양자산업 생태계 활성화** | 이주희·최형두 의원실 | 의원회관 2간담회의실 |
| | 9/29(화) 14:00 | **한국 엔터네인먼트 산업 발전의 저해요소와 극복방안** | 이재정 의원실 | 의원회관 1세미나실 |
| | 9/30(수) 09:30 |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쟁점과 대안** | 곽규택 의원실 |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
| | 9/30(수) 10:00 | **탄소중립 성과관리를 위한 기후정책 성과감사 세미나** | 김용태 의원실 |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 |
| | 9/30(수) 13:30 | **금융 AI 시대의 소비자 권리와 금융회사 책임 정책토론회** | 박성훈 의원실 | 의원회관 2세미나실 |
| | 10/1(목) 13:10 |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논란과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 | 강민국·박대출 의원실 | 의원회관 1세미나실 |
| | 10/2(금) 13:30 | **케이블방송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지역성 확보를 위한 노·사 공동 국회토론회** | 한준호·이훈기 의원실 등 |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 |
| 자료집 등 | 9/28(월) | **「Data+」 제2026-15호(통권 제39호)** | 국회도서관 | |
| | 9/30(수) | **「금주의 서평」 제2026-37호(통권 제796호)** | | |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5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시 | 내용 | 주최 | 장소 |
|---|---|---|---|---|
| 자료집 등 | 9/21(월) | 「최신외국정책정보」 제2026-12호(통권 제36호) | 국회도서관 | |
| | 9/22(화)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19호(통권 제307호) | | |

#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 분야 | 내용 |
|---|---|---|
| 9/21(월) | 노동 | 법원, 노란봉투법에 따른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첫 기각 |
| 9/21(월) | 노동 | 서울행정법원,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집행정지 결정 |
| 9/22(화) | 건설/부동산 | 세종 건설클레임센터 Monthly Insight 9월호 |
| 9/22(화) | 소송 | 재판소원 제도 도입 5. 사전심사를 통과한 재판소원 사건 |
| 9/23(수) | 조세 | Tax Intelligence 9월호 |
| 9/23(수) | 공정거래 | EU 배제남용 가이드라인 채택에 따른 주요 판단기준과 시사점 |
| 9/23(수) | 기업인수/합병 | 가상자산거래소 인수계약에 대한 매도인들의 기망 및 진술·보증 위반을 인정하여 약 241억 원의 매매대금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남형기** | 고문

프로필보기

**윤형중** | 고문

프로필보기

**김건훈** | 수석전문위원

프로필보기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이승상**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